【 2016.2.01(월) 강원일보 】

도로 확충 사업에 5천억원 투입

국도망 확충 9개 노선 3,995억 포함 건설업계. 수익성 향상 기대
지방도 15개소 등 실시 …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도 1조6천억 집행

올해 도내 도로 확충사업으로 5,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도간 또는 시·군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발전이 탄력을 받고 도내 건설업계는 수주물량 증가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도, 국지도, 지방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진입도로 등의 사업에 총 5,2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국도망 확충에는 총 9개 노선에 3,995억원이 들어간다.

강릉~횡성 간 국도 6호선의 강릉 두능~연곡(12.6㎞) 구간은 174억원을 투입해 올해 개통하고 횡성 서원~공근은 150억원을 배정,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국도 6호선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면 영동고속도로 통행량 포화로 인한 지정체가 해소돼 지역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 5호선(원주~철원), 7호선(삼척~고성), 31호선(양구~봉화), 35호선(강릉~태백), 38호선(태백~삼척), 42호선(원주~동해), 46호선(춘천~고성), 59호선(태백~평창) 등도 공사·실시설계·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된다.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평창 봉평면 면온IC~보광(135억원) △평창 대관령면 월정삼거리~차항(214억원) △평창 대관령면 횡계IC~진부(22억원) 등에 올해 사업비로 371억원이 쓰이고 향후 440억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4개소 347억원) 및 지방도(15개소 500억원) 확·포장사업도 실시해 국토 반나절 생활권 및 도내 2시간대 도로망 체계를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주문진~속초고속도로(18.9㎞, 265억원)와 동해~삼척고속도로(18.6㎞, 183억원) 4차선 신설사업을 준공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신설에 8,948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 원주~제천 1,918억원, 영천~도담 6,000억원, 경북선 철도 이설 30억원 등 모두 1조6,8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유학렬·하위윤기자

건설공기업, 예정가격 산정방식 정상화 박차

公共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

LH·철도公·도공·수공 '-' 복수 예가 운용 없애
적정 공사비 지급 확산
"다른기관도 동참해야"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하 예가) 산정방식이 정상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어 한국도로공사도 예가 산정방식을 손질해 적정 공사비 지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3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오랜 기간 불공정 관행으로 이어온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잇따라 개선하고 있다.

LH는 그동안 설계금액 대비 94~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 15개를 뽑다가 올 들어 기초금액 대비 98~102% 범위에서 산정하고 있다. 단 LH는 기초금액을 올해는 설계금액의 98%, 내년부터는 99% 수준에서 산정키로 했다.

철도공단도 그동안 설계금액 대비 95~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산정했으나, 올 들어 기초금액 대비 97.5~102.5% 범위에서 산정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이달 입찰공고분부터 설계금액의 97~103% 범위 내에서 복수 예가 15개를 산정키로 했다.

이로써 4대 건설공기업 중 음(-)의 복수 예가를 운용하는 곳은 사라지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설계금액 대비 ±2.5%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들이 '공사비 누수'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예가 산정 방식 정상화에 나선 것은 본지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발주자들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통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예가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적정 공사비 지급과 시공 품질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기초금액 대비 ±3%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산정하지만, 입찰공고문을 통해 음(-)의 복수 예가를 산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기초금액 대비 0~-5%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조달청 수준(±3%)으로 예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 말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사정금액을 없앴지만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92~100% 범위에서 복수 예가를 뽑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공기업의 대표적인 '갑(甲)질'로 손꼽힌 예가 산정 방식이 바뀌어 공공공사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이제는 건설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예가 산정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건설업 BSI 변동 추이

건설사 체감경기 호전

1월 BSI 72… 전월보다 7p↑

주택시장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풀린 모습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건설업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72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50대 안팎을 맴돌던 건설업 BSI는 작년 2분기와 3분기에 70대 안팎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주택공급 과잉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지난해 11월과 12월 건설업 BSI는 각각 69와 65로 나타났다.

이번 급등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대림산업은 2014년 영업적자에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GS건설은 창사 후 처음으로 '매출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주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중견건설사들의 실적도 양호할 전망이다.

김기룡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청구공사 금액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건설사들의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매출 BSI와 채산성 BSI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75였던 건설업 매출 1월 BSI는 80으로 뛰었다. 건설업 채산성 BSI는 같은 기간 80에서 84로 올랐다.

그러나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전망치는 밝지 못하다.

건설사들이 예상한 2월 건설업 BSI는 69다. 1월보다 3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최남영기자

【 2016.2.01(월) 건설경제 】

올 도로예산 60% 상반기에 푼다

〈8조3752억원〉

국도 217곳에 3.5조 등 5조 가량 조기 투입

재정-민자구간 연속 도로 요금 중간정산 필요 없는 원톨링 시스템 11월 시행

올해 전체 도로예산의 60%인 5조원가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처럼 재정-민자 구간으로 나뉜 도로를 중간정산 없이 최종 목적지에서 한번에 요금을 내는 '원톨링(One Tolling) 시스템'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분야 주요 정책목표를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으로 정하고 이 같은 세부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도로예산 8조3752억원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 총 21개소에 1조3927억원을 투자한다. 상주~영덕 등 6개 노선 241㎞를 개통하고, 광주~완도(강진) 등 7개 노선 164㎞를 새로 착공한다. 연말 개통되는 상주~영덕,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경북 내륙과 강원도 낙후지역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다. 지난해 말 부분 개통한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6월에 전 구간이 연결된다.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11월 개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고 4월 개통하는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수도권 남부지역 혼잡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완도(강진), 창녕~현풍(중부내륙선), 동이~옥천(경부선) 확장 등 지역 숙원사업이 첫삽을 뜨고 봉담~송산, 이천~오산, 파주~양주·포천 구간 착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1단계인 서울~성남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다.

국도의 경우 총 217개소에 3조49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신규 착공예산만 1조7861억원 규모다. 고군산국도 등 58개소, 497㎞가 개통하고 충청내륙 등 23개소, 246㎞가 신규 착공한다. 오수~갈마 등 10개소는 굴곡이 심한 도로 선형이 반듯하게 펴지고, 단양~가곡 등 48개소는 4~8차로로 확장된다.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에 950억원, 지자체 간 광역도로 17개소에 663억원 등 지원도로 예산도 적기에 투입돼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풀어준다.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에도 4795억원이 투자된다. 나들목(IC) 간격이 먼 양평·옥산·음성·현풍·통도사 등 5곳에는 하이패스 나들목이 추가 설치돼 진출입이 쉬워진다.

또 고속도로 정체개선을 위해 영동선 여주분기점 등 3곳에 갓길차로를 추가하고 나들목 접속도로 확장 등을 병행해 내년까지 정체구간을 251㎞에서 176㎞로 30% 줄인다.

서울~춘천 등 재정-민자 구간이 연속으로 있는 6개 고속도로에는 원톨링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중간에 수차례 멈춘 후 통행료를 정산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6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막대한 도로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2016년 신규 착공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16년 예산	비고
계	42개 사업	60,421	2,202	
고속도로 (5건)	파주-포천	8,111	54	4차로 신설
	광주-강진	6,700	172	4차로 신설
	창녕-현풍	633	200	4→6차로 확장
	동이-옥천	187	6	4→6차로 확장
	서울-세종	14,065 (보상비)	-	6차로신설(서울-성남)
국도·국대도 (23건)	충청내륙고속화1	2,959	7	4차로 신설 4→6차로 확장
	태인-산내	129	2	시설개량
	장흥-유치	615	6	시설개량
	보령주포-오천	91	2	시설개량
	순창동계-적성	160	2	시설개량
	청도-밀양1	440	2	시설개량
	단양-영월	763	4	시설개량
	옥천-도암	306	3	시설개량
	청도-밀양2	663	4	시설개량
	홍성-서부남당	126	2	시설개량
	삼자현터널	624	4	2차로 신설
	팔탄-봉담	491	2	4→6차로 확장
	포산-서망	1,382	6	시설개량
	화엄사진입도로	131	2	시설개량
	평택-오산	255	2	4→6차로 확장
	방림-장평	807	6	시설개량
	남면-정선	776	6	시설개량
	영양-평해	849	6	시설개량
	고로-우보	790	6	시설개량
	포항-안동2	2,195	6	2→4차로 확장
	용궁-개포	289	2	시설개량
	용상-교리1	1,607	4	4차로 신설
	용상-교리2	1,377	4	4차로 신설
국지도 (8건)	포진-문막	52	2	2→4차로 확장
	이호-양곡	103	2	시설개량
	동항-안성	301	5	시설개량
	도계-장성	281	2	시설개량
	쌍백-봉수	254	2	시설개량
	도척-실촌	375	5	2→4차로 확장
	길상-선원	321	2	2→4차로 확장
	문동-송정IC	1,383	4	4차로 신설
혼잡도로 (4건)	을숙도-장림	730	110	4차로 신설
	상개-매암	440	128	4차로 신설
	용두-담양	73	15	4→6차로 확장
	동천(우안제)	203	50	4차로 신설
민자고속도로(2건)	봉담-송산	4,330	709	4차로 신설
	이천-오산	4,054	644	4차로 신설

【 2016.2.01(월) 건설경제 】

발주기관에 하도급분쟁 '직접조정' 유도… '갑질'은 엄단

하도급협의회 구성해 해결
불합리한 관행도 지속 감시
건설사 M&A 사전 심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민주화 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법집행 신뢰성 확보 등에 포인트를 뒀다.

우선 공정위는 발주기관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분쟁을 직접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분쟁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만큼 공정위는 발주기관에 하도급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주도하는 하도급분쟁 조정은 공정위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구축할 예정인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로 집행하도록 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물론 유보금과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정산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유보금은 사실상 하도급대금의 일부인데 하자보수 등의 담보 목적으로 지급을 유예해 부당한 대금 감액이나 지연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추가공사·계약변경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물량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기업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공기업들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자신이 부과받은 과태료를 건설사에 전가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도 공기업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포착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건설업 등에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선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M&A에 대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연관산업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올해 공정위 업무의 한 줄기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에 조사목적·대상 등을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 현장조사 과정 기록, 조사 자료목록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절차 규칙'과 사전처리 지연 방지, 공정한 심결보좌 보장 등을 위한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조사단계에서 사전분석을 강화하고 심결단계와 소송단계에서는 심의준비절차 활용과 사건처리 담당자의 소송 공동수행자 지정 등을 통해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담합 가담자 승진 제한' 실현 가능성은

법 개정·공감대 필요… 제도화 쉽지 않을 듯

시장과 입법기관 설득 미지수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제재 의무화가 제도화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진 제한이나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직접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기업이 의무적으로 담합 가담자를 제재하는 내용의 사내처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담합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이 사내처리 규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현행 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현행 근거규정 이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지금 여건 아래서는 공정위의 의도대로 사내처리 규정 제정을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내제재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담합 가담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내제재가 내려지게 되면 그만큼 담합 재발방지 효과도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담합 가담자를 제재하기 위한 사내처리 규정의 제정은 제도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담합 가담자의 사내제재를 권고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데, 사내제재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박경남기자

아하! 그렇구나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자본금 조건 미달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Q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자본금 조건 미달을 이유로 한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A 甲회사는 2010년도에 자본금 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경영이 어려워져 2013. 4.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乙행정청은 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甲회사가 2011. 12. 31. 기준으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는 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3. 10.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예외사유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본금 기준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자본금 기준 미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시행령 조항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자본금 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은 문언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말소사유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예외사유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조항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에 있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건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5.28. 선고 2015두37099 판결[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곧바로 무산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해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 2016.2.01(월) 건설경제 】

종심제 입찰, 실적 제출 쉬워질 듯

조달청, 건협 '시공실적 심사용 DB' 활용 추진… 연내 시행 예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의 시공실적 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대한건설협회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따르면 건협이 최근 구축한 '시공실적 심사용 DB시스템'을 종심제 입찰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종심제 입찰에서는 입찰참여 건설사의 수행능력과 투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가운데 수행능력 분야에서는 공사실적 등을 평가한다.

그런데 실적평가를 받으려면 과거 공사를 수행한 발주기관에서 실적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입찰 때마다 공사를 수행한 발주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떼고 입찰을 하는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행정을 하는 셈인데다 서면 제출에는 위변조 우려도 따른다.

이에 따라 건협은 '동일공법·구조형식 표준 분류기준'을 마련해 시공실적 심사용 DB시스템을 구축했다. 종심제 시범실시 기간 동안 축적한 건설사들의 실적은 3000건에 달한다.

이를 발주기관의 전산망과 연결하면 건설사들이 발주기관을 돌아다니며 입찰 때마다 일일이 실적정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건협은 최근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시스템 활용을 건의했고 조달청에서도 이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달청은 건협이 구축한 DB를 입찰행정에 활용고자 이를 통째로 받기를 원하고 있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의 협의가 남아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협 DB를 활용한다는 방향은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할 사안이 있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내에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발주기관과의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협은 시범사업 기간에 건협 DB를 활용해 입찰을 진행했던 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발주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종합평가낙찰제를 시행하는 행정자치부와는 지자체 입찰행정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고 건협은 전했다.

건협 관계자는 "종심제 실적은 기존 발주기관이 최저가낙찰제 입찰에서 축적해 놓은 실적과는 달라 입찰 참가사들이 일일이 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건협 DB를 활용하면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되고 허위 작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심제에서는 동일공법이 다양하게 조합되면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동일공법·구조형식 표준 분류기준에 따른 실적을 활용해야 최적가치를 실현하려는 종심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